

지방소멸의 심화가 사회적경제 의존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감마 회귀 모형을 활용한 시군구 수준의 분석 -

The Impact of Regional Extinction on the Social Economy Using Gamma Regression Models

최 유 진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교수 - 단독저자)

Abstract

Eugene Cho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whether the degree of regional extinction intensifies dependency on the social econom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local municipalities in South Korea are utilized as the units of analysis. The dependent variables are proxy indicators measuring dependency on the social economy, while the main independent variable is the regional extinction index. Furthermore, to measure dependency on the social economy, this study utilizes the location quotient, which compares the proportion of the number of corporations, sales, and jobs created by the social economy within the municipality to national levels. Empirical results using gamma regression models indicate that in models where the number of corporations LQ and total sales LQ are set as dependent variables, an increase in extinction risk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dependency on the social economy. However, no significant effects is observed in the model where job LQ is the dependent variable.

Keywords: Social economy, social enterprise, co-operatives, regional extinction, gamma regression model

I. 서론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우리나라 전 지역, 특히 도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확산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하고 집행률

* 이 연구는 2023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발주로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해 수행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경제 연구'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을 높이는 등 국정과제 수준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집행 등 다양한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이다(임태경, 2024; 김정식 외, 2023; 이장욱 외, 2023). 하지만 소멸 지역의 특성상 민간 역량의 부족으로 사업의 기획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의 체계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오단이 외, 2024; 주소현 외, 2023). 전통적인 영리기업은 생산성에 기반하여 기업을 운영하지만, 사회적경제는 경영 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 목적이다(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따라서 소멸 위험이 심각한 지역일지라도 사회적경제는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영리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소멸 위기 지역에서 사회적경제가 지니는 의의는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사업의 수단이 된다는 점이다. 재화나 서비스의 수요가 많지 않은 소멸 위기 지역에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상법상 회사의 운영 방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기는 어렵지만, 자조와 호혜 그리고 연대를 경영 원리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소멸’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회복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훌륭한 사업체 설립의 수단이 될 수 있다(오단이 외, 2024; 원도연, 2019; 서수정·성은영, 2018). 둘째, 정부 정책 집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최유진, 2022). 예를 들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은 하드웨어 즉,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의 조성을 사업의 성과로 설정한 바 있다. 정부 지원 사업으로 창출된 공간의 활용은 경제적 산출이 거의 없는 사업이다. 따라서 이런 사업을 실제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성격을 지닌 법인격이어야 하는데, 사회적경제가 훌륭한 대안이 된다. 마지막 셋째, 사회적경제는 1차 산업이나 돌봄 등 부가가치 창출 규모가 크지 않지만, 지역에 필요한 산업 부문에서 주로 영업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에 이바지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의리라 할 수 있다(오단이 외, 2024). 이상을 고려할 때, 사회적경제가 지니는 중요성은 소멸 위기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며, 소멸 위기 지역에서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발굴의 타당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소멸의 정도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을 분석의 단위로 설정하였으며, 실증 분석 모형에서 종속변수는 사회적경제 의존성을 측정하는 대리지표를, 주요 독립변수는 소멸 위기 정도를 측정하는 지방소멸 지수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지방소멸 지수는 출산율과 유입 인구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멸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주 활용된다(Lee & Suh, 2021). 또한, 이 연구는 사회적경제의 의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법인수, 매출, 일자리 등에서 지역 내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국가 수준과 비교하는 입지상 계수(LQ)를 활용하는데, 입지상 계수가 1 이상의 값으로 도출된 지역은 국가 수준 대비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Klosterman, 1990).

II. 이론적 배경

1. 지방소멸의 의의

1) 지방소멸의 개념

지방이 '소멸'한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 주민이 전혀 살지 못하게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인구의 급감으로 지방세가 너무 적게 견혀 공공서비스에 관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지방자치단체를 주민 스스로 경영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정영아·김윤지, 2021). 인구의 규모가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더라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이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의 지원이 더해져도 최소한의 주민 삶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지점이 있을 수 있다(OECD, 2021). 이런 지점에 이르면 지방이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지점에 이르면, 필수적인 인프라마저도 부족하여 경제, 사회, 문화적 기능이 동시다발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다(Yu 외, 2022; Papadopoulos & Baltas, 2024). 이 상태를 지방소멸로 부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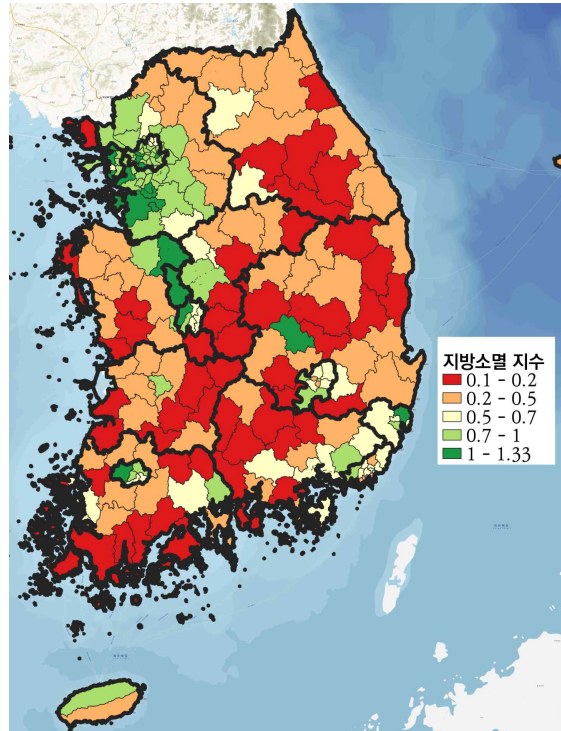
2) 지방소멸의 측정 지표와 현황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보원은 매년 지방소멸위험 지수를 발표하는데,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구분하고, 다시 0.2-0.5 지역은 '소멸위험진입단계'로, 0.2 미만 지역은 '소멸고위험단계'로 구분한다. 지방소멸위험 지수(이하, 지방소멸 지수)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수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이 수식에 따르면, 지방소멸 지수는 가임기 여성의 인구 규모와 비례하며, 고령인구 규모와는 반비례한다. 따라서 지방소멸 지수가 높아지려면 즉, 지방소멸에서 안전한 지역이 되려면, 가임기 여성이 증가하거나, 고령자 수가 감소하면 된다. 반대로 가임기 여성이 지역을 떠나거나 지역에 고령자 유입이 증가하면, 지방소멸 지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text{지방소멸 지수} = \frac{\text{20-39세 여성인구수}}{\text{65세 이상 고령인구수}}$$

다음의 <그림 1>은 2023년도 5월 기준 지방소멸 지수를 지도에 표시한 것이다. 이 지도는 연구일 기준, 가장 최신 인구 데이터인 2023년 5월을 기준으로 저자에 의해 재작성된 것으로, 소멸고위험 단계 지역(소멸지수 0.2 미만)은 52곳, 소멸진입단계 지역(소멸지수 0.2-0.5)은 68곳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총 120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구분되며, 이는 고용정보원의 2022년 조사보다 일곱 기

초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한 결과이다. 대다수의 ‘도’ 단위 광역지자체 내의 군과 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수도권인 경기도 내 시군도 다섯 곳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1〉 지방소멸 지수의 분포(2023년 5월 기준으로 재작성)

2.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지방소멸 대응

1)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맥락과 현황

수차례에 걸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제출된 법안은 2020년 11월 6일에 제출된 법안으로 이 법안은 사회적경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정의에서 사회적경제의 키워드는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으로 볼 수 있다(박윤환 외, 2022).

하지만 우리나라의 제도적 맥락에서는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사회적경제를 정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법적 근거 없는 조직체가 사회적경제조직임을 표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제도화된 조직 유형을 중심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강하다(박윤환 외, 2022). 사회적경제 조직 유형은 크게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다시 예비 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¹⁾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²⁾으로 구분한다. 크게 네 가지 조직 유형이 제도화된 조직체³⁾로 볼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는 이들 조직체가 활동하는 모든 영역의 합집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사회적경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형성되어 집행될 때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동 생산(co-production) 관점에서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 왔다(최유진·최은호, 2022; 윤길순·최우석, 2015). 중앙정부에 의해 형성된 대표적인 지방소멸 대응 정책인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많이 거론된 것이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지의 후속 대책으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유도한 바 있다(문선남·이석환, 2023; 김보미 외, 2019). 또한, 주민 주도로 농촌에 구축된 시설·인력·조직 등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특화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지역별 성과 지표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포함하고 있을 정도로 낙후된 농촌을 재생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적지 않음을 중앙정부도 인지하고 있다.

한편, 2024년 현시점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중앙정부의 정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정안전부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조성하여 지원하는 기금으로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이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평가한 후 재정을 지원한다. 중앙정부가 재정을 마련하되, 사업의 수립 및 추진은 바텀-업 방식이다. 2022년에는 7,500억 원 정도를 지원하였으며, 매년 1조 정도의 기금을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투자하게 된다(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역량으로 추진 사업을 기획하고 실제 이를 집행하는 것이다. 담당 공무원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하며 민간과의 거버넌스 구축이 절대

1) 「협동조합 기본법」이 정의한 협동조합 조직체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 등이다.

2) 일반협동조합은 법률상 용어가 아니다. 법률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협동조합으로 구분하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협동조합을 통칭하여 일반협동조합으로 부르는 경향이 있다.

3) 마을기업은 네 가지 대표적 사회적경제조직 유형 중 유일하게 국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조직체이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정의가 있는데 이 법률에 의하면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적으로 필요한데, 사회적경제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에 의해 2022년 우수 사례로 선정된 전라남도 신안군의 <섬살이 교육전문센터 ‘로빈슨 크루소 대학’ 구축> 사업의 기획은 사회적경제기업인 코끼리 협동조합이 맡았으며, 현재까지도 신안군과 협력하며 사업의 큰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⁴⁾

III. 연구의 방법

1. 분석의 단위

이 연구의 분석단위(unit of analysis)는 지방소멸 지수가 고용정보원에 의해 산출되는 최소 단위 지방행정구역으로서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제주도의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포함된 229개 지방행정구역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 행정 구역임에도 표본에 포함되었으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시로서 자치권이 존재하는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임에도 포함되었다. 2023년 5월 기준 세종시의 인구 규모는 30만 명 수준으로 타 광역 지방자치단체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이며,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 규모는 약 50만 명과 18만 명 수준으로 비록 자치권이 없지만, 규모 면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작은 편이 아니다. 따라서 세종시와 제주시 및 서귀포시를 다른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분석한다.

2. 조작적 정의

1) 종속변수의 선정과 조작적 정의

(1) 입지상 계수(Location Quotient, LQ)의 활용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존성이다. 지역 안에서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입지상 계수이므로 이 연구도 입지상 계수를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존성을 계량화한다. 입지상 계수는 전국 산업과 비교하여 특정 지역의 산업이 갖는 상대적 집중도 또는 특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된다(Klosterman, 1990). 따라서 사회적경제를 하나의 산업으로 간주하면, 특정 지역에서 전체 산업대비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존성(집중도 또는 특화 정도)을 수치로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입지상 계수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도출한다.

⁴⁾ 참고: <https://www.nocutnews.co.kr/news/5817381>

$$LQ = \frac{e_s/e_t}{E_s/E_t}$$

e_s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규모'

e_t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제 규모'

E_s : 국가의 '사회적경제 규모'

E_t : 국가의 '경제 규모'

결국 이 수식은 지방자치단체별 사회적경제의 비중을 국가의 비중으로 표준화하는 것이다. 입지상 계수 도출을 위한 모든 분모는 고정된 상태에서 분자만 지역별로 바뀌는 것이므로 국가 비중 대비 시군구별 비중으로 구할 수 있어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하다. 국가의 비중과 지역의 비중이 정확히 일치하면 입지상 계수가 1로 도출된다. 예를 들어, 특정 기초시에서 사회적경제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5%이고, 국가 경제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5%라면, LQ 산식에서 $5 \div 5$ 가 되어 1로 도출된다. 따라서 LQ가 1을 초과한다는 의미는 국가의 비중을 고려할 때, 지역에서 사회적경제의 비중이 높다는 뜻이고, 1 미만이라면 반대로 지역에서 비중이 국가보다 낮다는 의미가 된다.

(2) 종속변수의 선정

이 연구는 사회적경제 법인수 LQ(이하, 법인 LQ), 사회적경제 매출액 LQ(이하, 매출 LQ), 사회적경제 창출 일자리수 LQ(이하, 일자리 LQ) 등을 사회적경제 현황을 대리하는 지표로 선정하여 종속변수로 활용한다. 세 변수는 모두 사회적경제의 성과 지표라 할 수 있는데, 지방소멸 지역에서 이들 변수의 의미는 조금씩 다르다.

먼저, 법인(수) LQ의 선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첫째, 법인 설립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매우 중요한 지표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예: 정환 외, 2020; 이윤숙·문성욱, 2016 등). 따라서 전체 법인 설립 건수 중에서 사회적경제 유관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 해당 지역은 사회적경제가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의 측면이다. 법인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실에서 소멸 위기 지역에는 마땅한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오단이 외, 2024). 만약, 이들 지역에 사회적경제 법인의 비중이 높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을 떠나지 않은 주민이나 공동체가 창업에 나설 경우, 현실적으로 사회적경제 유관 법인이 대안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매출 LQ는 지역내총생산에서 사회적경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은 “일정 기간 정해진 경제구역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 합”을 의미하며, 경제구조나 규모 파악에 자주 활용된다. 고전적 경제 성장이론(the classical economic growth theory)에 근거하여 지역경제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가장 많이 분석하는 지표가 GRDP라 할 수 있다(예: 황경호, 2021; 김교범·진창하·강임호, 2019; 윤순덕·박공주, 2007 등). GRDP는 국민 경제상 지역경제의 위치를 알게 하고, 지역경제 상호 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지역적 분석과 지역개발시책 수립에 활용하며, 지역 내 산업구조의 실태를 파악하여 산업시책의 구체적 방향 결정, 소득분배의 상태를 분석함으로써 효율적 생산요소 재분배, 지역 총수요의 구성요인을 파악하고 경제성장에 있어 각각의 기여율을 측정하여 효율적인 수요방안 강구하는 데 활용하는 등⁵⁾ 정부 입장에서도 지역경제 정책 수립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매출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입지상 계수를 도출하는 것은 사회적경제 성과의 지역 분배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창출 일자리(수) LQ는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정책이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분석의 필요성이 크다. 법인이 창출하는 일자리의 수는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최고의 지표라 할 수 있다(강준규·오민홍, 2020; 김선재, 2018). 일자리 창출은 도시재생 영역이든, 지역경제 활성화 영역이든, SOC 등의 기반시설 영역이든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성과지표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의 대표적 유형 중 하나인 사회적기업의 주무 부서가 고용노동부인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경제 육성정책의 중요한 목표이다. 실제로 2022년 자율경영공시 자료(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의하면, 전체 사회적기업 유형 중 64.4%가 일자리 제공형으로 인증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함의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일자리 LQ를 지표로 선정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표 1>은 이 연구에 포함된 사회적경제 현황 대리 지표의 조작적 정의이다. 먼저 법인수 LQ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시군구별 사회적경제기업 수와 모든 법인 수가 필요하다. 시군구별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사회적기업 수와 협동조합 수를 더한 값에서 중복 유형 즉, 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수를 뺀 값으로 구하였다. 또한, 매출 LQ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시군구별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과 시군구별 GRDP가 필요하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온라인 사업보고서(2022년 기준)를 근거로 시군구별 매출의 합산을 통해 계산하였다. 한편, 일반협동조합의 매출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추정을 위해 「2021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이하, 2021년 실태조사)가 근거로 활용되었다. 기획재정부 행정자료(출처: coop.go.kr)를 토대로 시군구별 등록 (일반)협동조합의 수를 구한 후, 이 수치에 일반협동조합 운영 추정률인 42.8%를 곱하고, 이 값을 다시 운영 추정된 일반협동조합의 평균 매출액인 2억 7,388만 원으로 곱하여 시군구별 일반협동조합의 매출 합을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LQ를 구하기 위해서는 시군구별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출 일자리 수와 경제 활동 인구 수가 필요하다. 시군구별 사회적경제

5) 출처: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08

제기업의 창출 일자리 수는 사업보고서에 근거하여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창출 일자리를 구하였고, 일반협동조합 일자리 수는 매출과 마찬가지로 2021년 실태조사를 토대로 추정하였다. 시군구별 일반협동조합의 수에 추정된 운영 일반협동조합 비중(42.8%)을 곱한 후, 2021년 실태조사에서 추정된 일반협동조합 1개당 추정된 유급근로자의 수인 5.4를 곱하여 도출하였다.

〈표 1〉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

종속변수	지표 설명	조작적 정의	출처
법인 LQ	시군구별 사회적 경제기업 수	사회적기업 수+협동조합 수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년 5월 기준) • 협동조합: 기획재정부(2023년 5월 기준)
	시군구별 모든 법인 수	시군구별 등록 법인 수의 합	• KOSIS(2022년)
매출 LQ	시군구별 사회적 경제기업의 매출	사회적기업 매출+사회적협동조합 매출+일반협동조합 매출(시군구별 일반협동조합의 수×42.8%**×273,8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매출: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공, 202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매출: 사회적협동조합 사업보고서(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공, 2022년) • 시군구 별 협동조합 수: 기획재정부 • 일반협동조합 운영 추정률과 일반협동조합의 평균 매출액: 「2021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시군구 GRDP	시군구별 지역총생산 (당해년 2020년 가격)	• KOSIS
일자리 LQ	시군구별 사회적 경제기업 창출 일자리	사회적기업 유급근로자 수+사회적협동조합 직원 수(직원 조합원 포함)+일반협동조합 유급 근로자 수(시군구별 일반협동조합의 수×42.8%**×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유급근로자 수: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공, 2022년) • 사회적협동조합 직원 수: 사회적협동조합 사업보고서(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공, 2022년) • 시군구 별 협동조합 수: 기획재정부 • 일반협동조합 운영 추정률과 일반협동조합의 추정 유급 근로자 수: 「2021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시군구별 경제활동인구	시군구별 경제활동인구 수	• KOSIS(2023년 기준)

*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중복 유형을 의미
 ** 2021년 기준 일반협동조합 운영 추정률
 *** 2021년 기준 운영 추정된 일반협동조합의 평균 매출액
 **** 2021년 기준 운영 추정된 일반협동조합의 평균 유급근로자 수

2) 독립변수의 선정과 조작적 정의

다음의 〈표 2〉는 이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에 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는 지방소멸 지수(ext_index)로서 가입기 여성의 인구 규모를 고령자의 인구 규모로 나눈 값이다. ext_index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소멸 정도가 사회적경제 법인 수, 매출 규모, 일자리 창출 등의 의존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게 된다.

한편, 제3의 변수가 사회적경제 의존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 변수는 선행연구와 이론에 근거하여 추출하였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은 지역경제와 지방자치단체 지출이라 할 수 있다. 복지 국가 이론(Welfare State Theory)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에 의한 복지 서비스의 공급은 정부 역량이 부족할 경우에만 정당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정부 실패(governmental failure)의 결과로 본다(최유진, 2018; Pevcin, 2011; Salamon & Anheier, 1998). 경제 상황이 양호하여 재정적으로 정부의 역량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정부는 복지 수요의 충족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복지 국가 이론이 함의하는 것은 경제의 상황과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는 갈등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Pevcin, 2011; Salamon & Anheier, 1998). 이 연구도 복지 국가 이론이 설명하는 것처럼, 지역경제가 사회적경제 의존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고용률(employ_rat)과 사업체 수(busi_per)를 분석 모형에 포함한다.

반면,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의 협력 관계를 강조하는 이론도 존재한다. 이 두 주체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면, 사회적경제가 필연적으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비영리 조직 연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호 의존 이론(Interdependence theory)과 거버넌스 연구에서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공동 생산 이론(co-production theory)이 대표적인 이론이다. 상호 의존 이론에 따르면,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 문제의 최초 대응자로서 사회적경제와 같은 민간 조직이 필요하며, 사회적경제도 부족한 조직의 재정 및 인적 역량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Nissan 외, 2012; Pevcin, 2011; Salamon & Anheier, 1998). 한편, 공동 생산 이론은 정부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다. 정책의 형성과 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파트너가 참여할 수 있다면, 작은 정부가 구현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Loeffler & Bovaird, 2019; Tsujinaka, 외 2013). 접근 방법은 다르지만, 두 이론 모두 정부 부문과 사회적경제의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도 이런 협력 관계가 사회적경제 의존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자주 활용한 민간이전지출의 비중(trans_rat)을 회귀 모형에 포함한다.

이상의 통제변수 이외에도 이 연구는 분석 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위치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부산·울산·경남 더미변수(puk_dummy), 대구·경북 더미변수(tk_dummy), 광주·전북·전남·제주 더미변수(kjj_dummy), 대전·충북·충남·세종 더미변수(dsc_dummy), 강원 더미변수(gwon_dummy) 등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이들 광역 행정구역 더미변수는 기준 범주(reference category)인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비교된다. 또한, 이 연구는 기초시 더미변수(si_dummy)와 자치구 더미변수(gu_dummy)를 모형에 포함하여 시군구의 차이를 통제한다. 이들 더미변수의 기

준 범주는 행정구역으로서 ‘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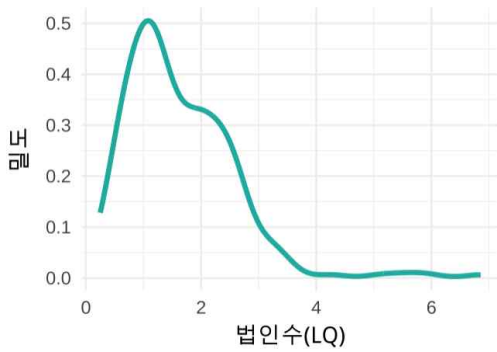
〈표 2〉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

유형	표기	조작적 정의	출처
주요 독립변수	ext_index	지방소멸 지수(20-39세 여성인구수/65세 이상 고령 인구수)	KOSIS(2023)
통제변수	employ_rat	고용률(2022년)	KOSIS(2022)
	log(busi_per)	인구 천면당 사업체수의 자연로그	KOSIS(2022)
	trans_rat	전체 지출 대비 민간이전 지출 비중	지방재정 365(2022)
	puk_dummy	부산·울산·경남 더미변수	NA
	tk_dummy	대구·경북 더미변수	
	kjj_dummy	광주·전북·전남·제주 더미변수	
	dsc_dummy	대전·충북·충남·세종 더미변수	
	gwon_dummy	강원 더미변수	
	si_dummy	기초시 더미변수	
gu_dummy	자치구 더미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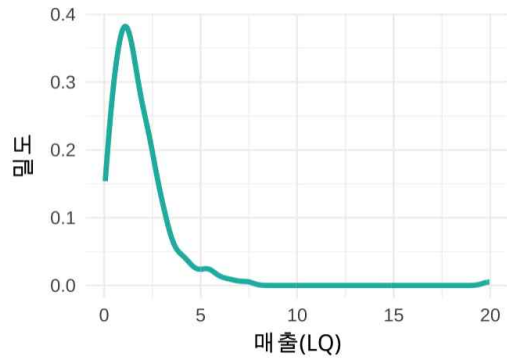
3. 분석 모형의 설정

1) 종속변수의 밀도 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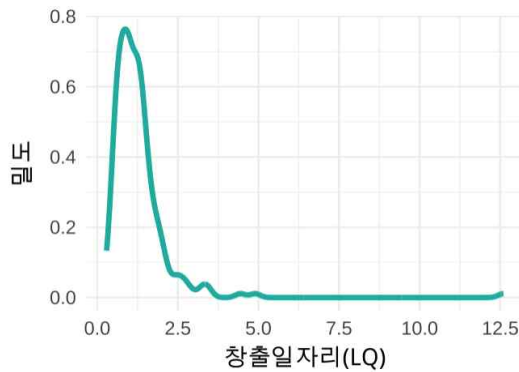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활용한 지표인 법인 LQ, 매출 LQ, 일자리 LQ 등은 두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0 이상의 실수(real number)라는 점이며, 둘째는 왜도(skewness) 문제로 정규 분포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음의 〈그림 1〉, 〈그림 2〉, 〈그림 3〉은 각각 법인 LQ, 매출 LQ, 일자리 LQ의 밀도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밀도 함수는 “연속 확률 변수를 가정할 때, 특정 구간 내에서 해당 값이 나올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이다. 밀도 함수를 통해 종속변수 분포의 형태, 중심 경향성, 이상값(outliers)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세 변수 중 법인 LQ의 분포와 중심 경향성이 다른 두 변수보다 정규 분포에 가깝지만, 이 변수 역시 그래프의 왜도(skewness)를 고려하면, 일반 선형 회귀 모형의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림 2〉 법인 LQ의 밀도 함수



〈그림 3〉 매출 LQ의 밀도 함수



〈그림 4〉 일자리 LQ의 밀도 함수

종속변수가 실수이며, 정규 분포가 형성되지 않을 때, 일반화 선형 모형 중 감마 회귀 모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감마 일반화 선형 모형은 정규성 가정이 전제될 필요가 없는 일반화 회귀 모형 군 중 하나이다(Ng & Cribbie, 2017).

2) 감마 일반화 회귀 모형의 설정

감마 일반화 회귀 방정식(Gamma Generalized Linear Regression Equation)은 선형 예측자(linear predictor) 및 로그 링크를 활용하는 링크 함수(link function) 그리고 반응 변수(Y) 등을 구성 요소로 한다(Reangsephet 외, 2020; Ng & Cribbie, 2017). 반응 변수는 반드시 비음수인 연속형 변수여야 하는데,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입지상 계수는 이를 만족한다. 이 연구의 선형 예측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ta = \beta_0 + \beta_1 IV + \beta_2 CV \tag{1}$$

방정식 (1)에서 선형 예측자(η)는 주요 독립변수(IV)인 ext_index와 통제변수 벡터(CV)의 함수로 정의된다. 감마 일반화 회귀 모형에서 일반적으로 링크 함수는 $g(\mu) = \log(\mu)$ 로 설정하는데, 이 함수에서 μ 는 반응 변수(법인 LQ, 매출 LQ, 일자리 LQ)의 평균을 의미한다(Reangsephet 외, 2020; Ng & Cribbie, 2017). 이제 선형 예측자에 링크 함수를 적용하면, $\eta = \log(\mu)$ 이므로, 최종적인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방정식 (2)로 표현할 수 있다.

$$\mu = \exp(\eta) = \exp(\beta_0 + \beta_1 IV + \beta_2 CV) \quad (2)$$

IV. 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 도출

다음의 <표 3>은 이 연구에서 활용한 모든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담고 있다. 대체로 종속변수인 입지상 계수의 표준편차는 평균보다 크지 않았지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왜도를 고려하면, 정규 분포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수의 이상치(outlier)도 표본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감마 일반회 회귀 모형 활용은 수치로도 정당화된다. 특히, 일자리 LQ의 왜도와 첨도가 정규 분포에서 가장 많이 벗어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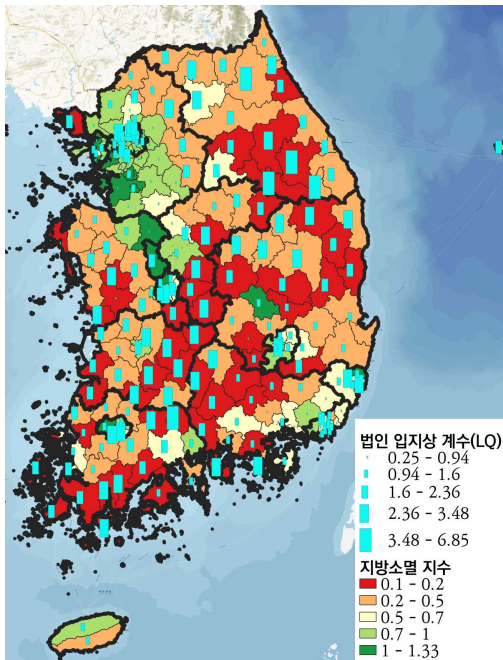
주요 독립변수인 지방소멸 지수(ext_index)의 평균은 0.5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구역은 소멸 위기 진입 단계에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가장 소멸 위기가 심각한 지역은 0.1의 소멸 지수를 나타냈으며, 가장 양호한 지역은 1.33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경제 현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경제를 통제하기 위해 모형에 포함된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busi_per)는 90.2개였으며, 표준편차는 40.15로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를 고려하면, 정규 분포를 많이 벗어난 변수로 판단된다. 따라서 감마 일반화 회귀 모형에서 자연로그를 취한 형태로 추정한다. 한편, 행정의 역할을 통제하기 위하여 모형에 포함된 민간이전지출의 비중(trans_rati)은 평균 15%였으며, 표준편차는 5%로 나타났다.

<표 3> 기술통계량(N: 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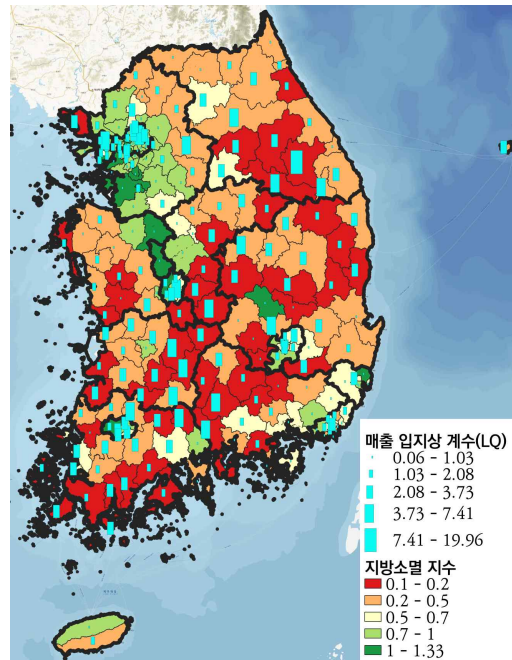
유형	표기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빈도
종속변수	법인 LQ	1.64	0.96	0.25	6.85	1.75	5.67	
	매출 LQ	1.84	1.78	0.06	19.96	5.13	45.70	
	일자리 LQ	1.28	1.00	0.29	12.60	6.80	69.58	
독립변수	ext_index	0.50	0.31	0.10	1.33	0.49	-0.79	

통제변수	employ_rat	64.01	6.27	49.3	82.4	0.37	-0.3	
	busi_per	90.20	40.15	49.95	476.55	5.85	45.66	
	trans_rat	0.15	0.05	0.06	0.29	0.85	0.30	
	puk_dummy							39
	tk_dummy							31
	kjj_dummy							45
	dsc_dummy							33
	gwon_dummy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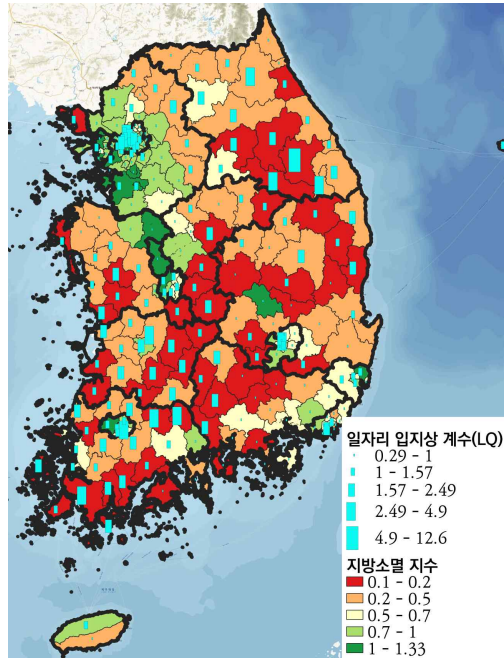
다음의 <그림 5>, <그림 6>, <그림 7>은 지방소멸 지도 위에 법인 LQ, 매출 LQ, 일자리 LQ 등을 막대그래프로 각각 표시한 것이다. 지도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대체로 소멸 위기가 뚜렷한 지역 일수록 막대그래프의 크기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경향은 법인 LQ 지도에서 가장 뚜렷하다. 실제로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도출한 결과, 지방소멸 지수와 세 LQ는 모두 음의 상관성을 나타냈는데, 법인 LQ와 지방소멸 지수의 상관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매출 LQ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법인 LQ와 지방소멸 지수
(상관계수: -0.478)



<그림 6> 매출 LQ와 지방소멸 지수
(상관계수: -0.336)



〈그림 7〉 일자리 LQ와 지방소멸 지수
(상관계수: -0.239)

2. 감마 일반화 회귀 모형의 추정 결과

다음의 〈표 4〉는 감마 일반화 회귀 모형의 추정 결과이다. 먼저, 모형의 적합도를 진단하기 위해 분산파라미터와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를 확인해야 한다. 이 두 지표는 모두 감마 회귀 모형의 적합도 진단과 관련이 깊다. 분산파라미터는 데이터의 변동성과 신뢰성에 관한 지표로서 분산파라미터가 크면, 데이터의 분산이 작아 변동성이 낮으므로 데이터의 신뢰성도 높다. 하지만 분산파라미터는 절대적인 기준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대적인 수치이다(Reangsephet 외, 2020; Ng & Cribbie, 2017). 이 연구의 법인모형, 매출모형, 일자리모형 등 세 가지 모형 중에서는 매출모형의 분산파라미터가 가장 컸으며, 법인모형이 가장 작았다. 이는 매출모형의 예측 신뢰성이 가장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AIC는 모형의 적합성과 복잡성을 평가하는 지표인데, 이 지표는 낮을수록 회귀 모형의 추정이 비교적 단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Ng & Cribbie, 2017). 이 연구의 추정 결과에서는 법인모형의 AIC가 가장 낮은 값으로 도출되었다. 법인모형은 모형이 비교적 단순하고 데이터를 잘 설명하지만, 변동성은 비교적 큰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 LQ가 종속변수인 법인모형의 추정 결과, ext_index(지방소멸 지수)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계수는 음수로 도출되었다. 이는 지방소멸 지수가 낮을수록 즉, 지역의 소멸 위기가 더 커질수록 사회적경제 법인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통제 변수 중 지역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주민 1,000명당 사업체수(log(busi_per))도 0.01의 유의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음의 회귀계수가 도출되었다. 이는 곧 사업체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사회적경제 법인에 대한 의존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체수가 많은 지역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 유관 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전형적인 영리 회사로 설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광역 행정 구역을 통제한 변수 중에서는 tk_dummy(대구경북), kjj_dummy(광주전라), dsc_dummy(대전충청), gwon_dummy(강원) 등이 모두 0.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양의 회귀계수를 도출하였다. 광역 행정 구역 더미변수의 레퍼런스 변수⁶⁾는 수도권 더미변수이다. 다시 말해, 이들 행정 구역 변수는 수도권 더미변수와 비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경북, 광주전라, 대전충청, 강원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보다 사회적경제 법인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매출 LQ가 종속변수인 매출모형의 추정 결과, ext_index는 0.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역시 음의 회귀계수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추정 결과는 지방소멸이 심한 지역일수록 사회적경제 매출에 대한 의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법인모형의 추정결과와 마찬가지로 (log(busi_per))도 0.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음의 회귀계수가 도출되었다. 이는 곧 사업체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사회적경제 매출에 대한 의존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역 행정 구역 더미변수 중에서는 puk_dummy(부산울산경남 더미변수)가 0.0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음의 회귀계수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보다 사회적경제 매출에 대한 의존성이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반면, gwon_dummy(강원 더미변수)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양의 회귀계수를 도출하였다. 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강원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의 매출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출 일자리의 LQ가 종속변수인 일자리모형의 추정 결과, 주요 독립변수인 ext_index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지방소멸과 지역의 사회적경제가 창출하는 일자리에 대한 의존성은 큰 관련이 없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표 4〉 감마 모형의 추정 결과

독립변수	법인모형		매출모형		일자리모형		VIF
	계수	t-value	계수	t-value	계수	t-value	
(Intercept)	3.119	4.431***	3.750	3.225***	-2.996	-4.368***	
ext_index	-0.779	-4.887***	-1.526	-5.797***	-0.139	-0.897	2.921
employ_rat	-0.003	-0.382	-0.001	-0.100	0.002	0.289	2.615
log(busi_per)	-0.507	-4.654***	-0.605	-3.363***	0.721	6.788***	1.161
trans_rati	-1.088	-1.045	1.858	1.080	-0.056	-0.056	2.896

6) 모형에 포함된 더미변수와 비교되는 기준 변수. 해당 변수까지 모형에 삽입하면, 자동으로 더미변수 중 하나가 레퍼런스 변수로 모형에서 삭제된다.

puk_dummy	0.061	0.626	-0.391	-2.411**	-0.294	-3.075***	1.654
tk_dummy	0.279	2.600***	0.052	0.295	-0.178	-1.703*	1.633
kjj_dummy	0.496	4.917***	0.202	1.210	0.301	3.057***	1.885
dsc_dummy	0.333	3.270***	-0.116	-0.689	-0.014	-0.140	1.512
gwon_dummy	0.909	7.000***	0.599	2.791***	0.513	4.050***	1.483
si_dummy	-0.052	-0.531	-0.165	-1.012	-0.257	-2.674***	2.651
gu_dummy	0.193	1.329	0.176	0.735	-0.112	-0.790	5.391
분산파라미터	0.546		2.622		0.731		
AIC	524.13		883.33		590.94		

***, **, *는 각각 0.01, 0.05, 0.1에서 유의함을 의미

V. 요약 및 정책 함의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소멸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다. 실증 분석 모형에서 종속변수는 사회적경제 의존성을 측정하는 대리 지표로, 독립변수는 지방소멸 지수로 설정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의존성은 법인, 매출, 일자리 등에서 지역 내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국가 수준과 비교하기 위하여 입지상 계수(LQ)를 활용하였다. 한편,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입지상 계수가 비음수인 연속 확률 변수로서 감마 분포를 따르므로 감마 일반화 선형 모형을 활용하여 결과를 추정하였다. 법인 LQ와 매출 LQ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에서는 모두 지방소멸이 심해질수록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지만, 일자리 LQ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에서는 영향이 없었다. 더미변수를 제외한 통제변수 중에서는 사업체 수는 법인 LQ와 매출 LQ 모형에서는 음의 영향을 미쳤으나, 일자리 LQ 모형에서는 양의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소멸이 심각한 지역에서 사회적경제는 창업 수단으로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 형성 과정에서 이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 지역 내 법인 비중과 매출 비중의 관점에서 사회적경제는 지방소멸이 심화할수록 중요성이 더 커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부문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주체라 할 수 있다. 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제외하고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금 및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의 기획과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내 관련 부서 또는 기관 간 연계성 향상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의 지속적 교류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과가 사회적경제 부문 활성화로 환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참여를 위한 학습 및 컨설팅 기회를 지속해서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사회적 일자리 창출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미 기술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특히, 사회적기업의 육성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이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지방소멸이 심각한 지역조차 사회적경제의 일자리 창출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법인의 설립이나 매출의 창출이 소멸지역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것처럼,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도 사회적경제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공공 일자리 사업에 사회적경제 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청년 대상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이 사회적경제의 직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사회적경제기업은 청년과 함께하는 사업을 기획하여 지방소멸 대응에 나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도 사회적경제 분야 일자리에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사회적 일자리가 지역 안에서 확대될 것이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 중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사업단의 추진 기관에 사회적경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역량 있는 노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체계의 재구성도 핵심 과제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로 지방소멸 시대, 사회적경제의 유용성이 실증적·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적지 않은 정책 함의를 내포하는데, 반드시 고찰해야 할 부분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발굴 및 육성 체계를 갖추는 부분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은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을 수료한 예비 사회적기업가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진출하면서 시작되었다. 진흥원의 육성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의 핵심 중 핵심이 아닐 수 없었다. 육성사업은 ‘서울·인천·경기’, ‘강원·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등 모두 다섯 권역의 육성기관 지정을 통한 권역별 유형과 사회적기업가의 관심을 반영한 특화 유형으로 이원화되어 추진되었다. 현재는 기존 사회적경제 관련 컨설팅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이루어지던 사업을 진흥원이 직접 추진하면서 사업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 진흥원이 권역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현재의 체계가 지속해야 한다면, 기존의 특화 부분만이라도 지방소멸 관점에서 다양한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기관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부분, 농어촌 부분, 산림 부분, 노인일자리 부분, 영유아 돌봄 등의 영역을 지정하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 관점에서 해당 분야의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한 특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기존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재편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준규·오민홍. (2020). 경제기반이론을 활용한 부산지역 일자리 성과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2(3): 1,095-1,105.
- 김교범·진창하·강임호. (2019). 외국인 유입이 주택가격과 GRD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주택연구』, 27(3): 115-146.
- 김보미·김명천·배기택. (2019).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진단요소 도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0(5): 29-37.
- 김선재. (2018). 지역경제와 지역대학: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9): 390-398.
- 김정식·임예린·허형조. (2023).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 방안에 대한 연구: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치학회보』, 13(2): 25-47.
- 박윤환·최충익·최유진. (2022). 「도시행정: 뉴노멀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 서울: 윤성사.
- 문선남·이석환. (2023). 지속성 있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역량요구도 분석. 『도시재생』, 9(3): 85-112.
- 서수정·성은영. (2018).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기반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과 지속가능성. 『공간과 사회』, 28(3): 12-47.
- 오단이·정은정·김선영·이은진·최유진. (2024).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사회적경제 사례 연구: 춘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4(2): 113-140.
- 윤길순·최우석. (2015). 사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거버넌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공동생산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경제평론』, 28(2): 279-340.
- 윤순덕·박공주. (2007). 은퇴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와의 관련성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8(3): 455-467.
- 원도연. (2019). 지역특화산업의 산업재생과 사회적경제 기반 도시재생 변화. 『지역사회연구』, 27(1): 27-48.
- 임태경. (2024).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성과와 예산집행률 간 관계성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8(1): 29-51.
- 이윤숙·문성욱. (2016). 창업의 수, 생존율 및 고용 성장에 관한 고찰. 『Korea Business Review』, 20(2): 121-141.
- 이장욱·이현우·김진덕. (2023). 경기도 인구소멸 위험 관련 전략적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 운영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2023-21.
- 정영아·김윤지. (2021). 머무르고 싶은 지역이란? - 지방정부 서비스와 재정이 지역애착과 거주기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3(3): 55-76.

- 정환·임영균·최필호. (2020). 대규모유통업체의 출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중심으로. 「유통연구」, 25(1): 101-125.
- 주소현·유다은·박희규·정수진·송지연. (2023). 인구소멸지역 해결 대안으로써 안동 청년마을기업 사례의 성공요인 분석. 「혁신기업연구」, 8(2): 17-42.
- 최유진. (2022). 도시재생 수단으로서의 사회적경제: 체제이론을 활용한 시론적 연구.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6(2): 3-30.
- 최유진. (2018). AHP를 활용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비교의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연구」, 11(3): 163-189.
- 최유진·최은호. (2022). 도시재생 정책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2(3): 29-50.
- 황경호. (2021). 문화체육관광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 「문화산업연구」, 21(1): 23-30.
- Klosterman, R. (1990). *Community Analysis and Planning Techniques*. Washington, DC: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Lee, J. & Suh, K. (2021). A New Index to Assess Vulnerability to Regional Shrinkage (Hollowing out) Due to the Changing Age Structure and Population Density. *Sustainability*. 13(16). <https://doi.org/10.3390/su13169382>.
- Loeffler, E. & Bovaird, T. (2019). Co-commissioning of Public Services and Outcomes in the UK: Bringing Co-production into the Strategic Commissioning cycle. *Public Money & Management*. 39(4): 241-52.
- Nissan, E., Castaño, M. & Carrasco, I. (2012). Drivers of Non-profit Activity: A Cross-Country Analysis. *Small Business Economics*. 38(3): 303-320.
- OECD/EC-JRC. (2021). Access and Cost of Education and Health Services: Preparing Regions for Demographic Change. *OECD Rural Studies*. Paris: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4ab69cf3-en>.
- Ng, V. K. & Cribbie, R. A. (2017). Using the Gamma Generalized Linear Model for Modeling Continuous, Skewed and Heteroscedastic Outcomes in Psychology. *Current Psychology*. 36: 225-235.
- Papadopoulos, A. G. & Baltas, P. (2024). Rural Depopulation in Greece: Trends, Processes, and Interpretations. *Geographies*. 4(1): 1-20. <https://doi.org/10.3390/geographies4010001>
- Pevcin, P. (2011). Size and Importance of Civil Society Sector. *International Journal of Arts & Sciences*. 4(17): 371-379.
- Reangsephet, O., Lisawadi, S. & Ahmed, S. E. (2020). Adaptive Estimation Strategies in

- Gamma Regression Model. *Journal of Statistical Theory and Practice*. 14(1). article 8.
- Salamon, L. M. & Anheier, H. K. (1998). Social Origins of Civil Society: Explaining the Nonprofit Sector Cross Nationally. *Voluntas*. 9(3): 213-248.
- Tsujinaka, Y., Ahmed, S. & Kobashi, Y. (2013). Constructing Co-governance betwee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Collaboration. *Public Organization Review*. 13: 411-426.
- Yu, Z., Zhang, H., Sun, P. & Guo, Y. (2022). The Pattern and Local Push Factors of Rural Depopulation in Less-Developed Areas: A Case Study in the Mountains of North Hebei Province,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10). 5909. <https://doi.org/10.3390/ijerph19105909>

접수일(2024년 06월 27일)

수정일(2024년 08월 05일)

게재확정일(2024년 08월 19일)

<국문초록>

지방소멸의 심화가 사회적경제 의존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감마 회귀 모형을 활용한 시군구 수준의 분석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소멸의 정도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역을 분석의 단위로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사회적경제 의존성을 측정하는 대리지표를, 주요 독립변수는 소멸 위기 정도를 측정하는 지방소멸 지수를 분석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사회적경제의 의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역의 법인수, 매출, 창출 일자리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국가 수준과 비교하는 입지상 계수(location quotient)를 활용하였다. 감마 회귀 모형을 활용한 실증 분석의 결과, 법인 LQ와 매출 LQ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에서는 지방소멸이 심해질수록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지만, 일자리 LQ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에서는 영향이 없었다.

주제어: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방소멸, 감마 회귀 분석

최유진(崔維眞: 단독저자) 현재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공공인재 전공 교수 및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며, 미국 클리블랜드 주립대학에서 “Adaptive Reuse of Religious Buildings in the U.S.”(2010)라는 주제로 도시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학문적 관심분야는 사회적경제와 지역활성화,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지속가능 도시, 도시환경 정책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사회적기업의 자원동원 능력과 경제적 성과: 패널 모형을 활용한 코로나 팬데믹의 조절효과 분석(2023)’, ‘도시재생 정책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2022)’ 등이 있다(echoi0816@icloud.com).